



IMF 충격과 농업의 대응

식량자급률 높이고 구조개선 앞당겨야

1997

년은 온 나라가 경제 불안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었던 것 같다. 노동법 개정과 문 속에 한해가 시작되어 몇몇 대기업의 부도사태가 이어지더니 연말에는 외환부족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국가적인 채무 불이행이 우려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에 금융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금융 위기의 여파는 새해에도 국민경제를 어둡게 할 것

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국제통화기금이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이행조건을 요구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 시대가 예견되어 농업부문에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IMF 태풍이라고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4년전 이맘때의 UR협상 타결보다 몇배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어떻든 우리는 이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겨를도 없이 IMF가

요구하는 재정긴축, 경제성장률 목표 및 산업구조조정 등의 이행조건을 준수하면서 새로운 진로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전반에 걸쳐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요구가 거세어지고, 환율상승에 따른 각종 농자재의 비용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농산물 소비 감소 등의 어려움도 예견되지만, 우리 농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IMF의 권

고가 아니더라도 우리 농업은 이미 선진화의 길로 들어섰으며, 농정개혁을 토대로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경제안정 위해 식량자급 노력 중요

경제가 침체되는 난국 속에서도 우리 농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특히 벼농사는 풍년을 이루어 국민의 식량불안을 해소시키고 경제성장에도 이바지 하였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쌀마저 모자랐다면 어땠을지 섬찝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식탁만 보고 자만할 것은 못된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아직도 전세계의 8억 인구가 기아에 허덕인다고 한다. 만성적인 북한의 식량난도 남의 일이 아니다.

연간 1천5백만톤의 곡물을 들여오는 식량 수입국으로서 쌀이 조금 풍족해졌다고 식량 증산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다.

혹자는 이러한 위기감을 과잉 반응이라고도 얘기한다. 더욱이 먹거리가 풍부해지고 국민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이 금액으로 5백원 밖에 안되는 세상이 되면서 아이들까지도 모자라면 수입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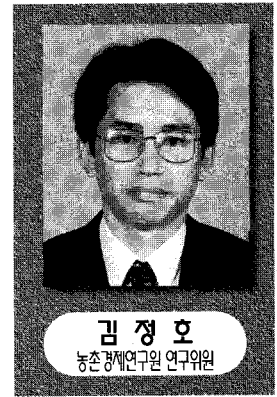
서 먹지는 말을 서슴치 않게 되었다. 이를 뒷받침 하듯이 일부에서는 비교우위론이나 국제분업론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식량부족 시대에는 어떤 곡물 수출국이라도 자국의 안정적인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수출 상대국은 차선으로 미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다.

따라서 기초식량을 자급한다는 것은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른바 헷지 코스트(hedge cost)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식량안보는 그 자체가 국민에게 안심감을 주는 '공공서비스'이다. 선진국 가운데 주곡을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가 없다는 사실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의 식량 전망에 대하여 월드워치연구소의 브라운 박사는 다가올 21세기가 '기아의 세기'라고 경고하면서 그 배경으로 여섯가지 새로운 환경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농업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증산의 기술적 가능성은 점점 축소되고 둘째, 자연자원의 무절제한 이용으로 잠재적 생산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셋째 주요 식량생산지역의 물 수요가 공급 능력을 넘어서고 있는 점 넷째



김 정 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화학비료 사용에 수량이 반응하지 않을 만큼 비효(肥效)가 정체되고 있으며 다섯째 많은 나라가 공업화 과정에서 수량 증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경지가 훼손되고 여섯째, 국가 차원의 인구 억제나 증산 노력이 부진하다는 점 등이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쌀의 자급력을 높혀 나가는 방향으로 정해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이미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국민적인 공감대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의 쌀 생산량 감소는 주로 재배면적의 급격한 감소에서 비롯되고 이는 다시 논의 밭 전환, 비농업적 전용, 휴경 등이 주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단수증대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지난 이태의 풍년은 좋은 기상 조건에도 기인한다. 하지만 양질

다수성 품종이 보급되고 안전영농을 위한 물관리나 병해충 방제와 같은 기술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취약 농업기반 투자·정책 지원 계속

IMF의 구제금융에 따른 이행 조건은 경제 전반에 걸쳐 긴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투융자의 조정에 대해서는 국가적 측면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일각에서 농업구조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내세워 투자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인지 신중한 판단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농업은 1992년부터 착수한 구조개선사업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 단계에 진입해 있다. 늦어도 21세기 초까지는 생산 및 유통기반을 확충하여 개방시대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구조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단지 경제적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기반을 다져가는 농업분야의 투자축소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IMF 요구에 따라 경제성장 목표를 수정하더라도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재정감축 예외조치 등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업생산의 급격한 축소의 반작용으로 국민경제에 불안올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볼때, 농업구조개선사업은 낙후된 산업의 기반정비와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분야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8월 구제금융 지원을 받을때 '사회적 소외계층 보호망' (Social Safety Net)이라는 제도를 인정하여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멕시코는 94년에 긴축통화 정책을 취하면서도 수출과 농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농업관련 세제감면의 축소에 대해서도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생산비에 직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업용 유류의 면세 및 각종 농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를 적용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지난 수년간 우리 농업은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키워왔

으나 선진국들의 농업생산성과 비교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수입농산물로 인해 시장이 축소되고 환율상승에 따라 농자재 값이 인상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제감면의 축소로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된다면 영농의욕은 급속히 쇠퇴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농업인들은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 여파에도 끈끈하게 대처하여 농업성장률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시켰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태재 건국 이래의 대풍을 기록하여 국민의 식량불안을 해소시키고 경제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농업인들의 의지와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농업투자의 축소나 농업관련 세제 조정에 대한 논의는 재정긴축의 최후 수단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업 투자 효율성 높이고 낭비요소 제거

최근의 금융 위기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원인이 지적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악화된 경제 상황에 정부가 적시처방을 내리지 못했다는게 금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다고 정부만을 탓할 것도 아니다. 기업의 방만한 경영

과 금융기관의 안일한 대출관행은 연쇄부도를 자초했으며, 국민들의 낭비성 과소비 행태도 가뜩이나 부족한 외화를 고갈시켰다.

이렇게 원인을 따지다 보면 농업은 국내 문제로 예외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닐까? 정책사업의 집행에 급급한 행정기관, 보조사업에 치중한 생산자단체나 농업법인의 과다한 시설투자, 그리고 농업인들의 정책자금 기대 심리 등이 농업투자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결국은 투자 축소론을 불러일으킨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투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 내부적으로는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분야에 대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여건 변화에 맞는 정책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집행과정의 낭비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경직성 경비를 절감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단체들도 경영혁신 측면에서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은 금융개혁에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

새해에는 정부와 농업인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지난 수년간 농정개혁을 위해 뛰어난 과정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저비용·고효율의 선진농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을 한층 앞당겨야 한다.

”

정책금융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면서 건설한 농업금융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회원조합간의 합병이나 통폐합 등을 통하여 경영합리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농업인들도 이미 예고된 개방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경영혁신에 노력해야 한다. 이제는 더이상 정부정책에 기대어 소득을 보장받는 시대가 아니다.

스스로 시장경쟁에 나서서 수요감소로 타격이 예상되는 화훼나 과수 및 고급과채류 등에 대한 작목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나아가 생산비 절감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농업은 지난 4년간 추진된 농정개혁과 국민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한 투자 확충에 힘입어 UR타결시의 불안감을 떨치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

다. 시장개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갖추었으며, 나아가 세계시장을 향한 적극적인 수출 전략이 농정의 중요한 방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시장원리를 저해하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창의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자력 성장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새해에는 정부와 농업인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지난 수년간 농정개혁을 위해 뛰어난 과정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저비용·고효율의 선진농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을 한층 앞당겨야 한다. 아울러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농업구조개선사업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책담당자나 농업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지만, 국민적으로도 그 어느때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농약정보**